

# 온라인 경매 / 거래 플랫폼 이용 약관 및 정책

##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플랫폼(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온라인 경매 및 거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판매자 또는 구매자, 이하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거래절차, 분쟁 해결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정의)

- “입찰(Bid)”이라 함은 회원이 특정 상품에 대해 일정 금액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시작가(Starting Price)”는 판매자가 정한 경매의 최저 시작 가격이다.
- “즉시구매(Buy-It-Now / Immediate Purchase)”는 경매 대신 정해진 가격으로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말한다.
- “낙찰(Winning Bid / Win)”은 입찰 또는 즉시구매가 성공하여, 해당 상품이 특정 회원에게 판매가 확정된 상태를 말한다.
- “결제(Payment)”는 낙찰 후 판매대금 정산 절차를 의미한다.
- “취소(Cancellation)”는 낙찰 혹은 결제 이후라도, 거래를 무효 또는 철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환불(Refund)”은 이미 지불된 금액을 반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회원(member)”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에 가입한 자를 말하며, 판매자(Consignor) 또는 구매자(Buyer)가 될 수 있다.

## 제 2장 서비스 이용 및 회원가입

### 제 3조 (약관의 공지 및 변경)

-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 내용 및 시행일을 명시하여 일정 기간(예: 최소 7일,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 시 최소 30일) 이상 공지해야 한다.
- 회원은 공지된 변경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 4조 (회원의 자격 및 책임)

- 회원은 가입 시 정확한 실명, 연락처, 계좌 정보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타 허위 정보 제공은 금지된다.
- 회원은 자신의 계정(ID/비밀번호)의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다.
- 회사는 필요 시 회원에 대해 본인 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고, 허위 정보 제공, 반복 취소, 사기 의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 3장 경매 및 거래 절차

### 제 5조 (경매의 유형)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경매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일반 경매 (최고가 입찰 방식)
- 즉시구매 옵션이 있는 경매 (Buy-It-Now)
- 기타 회사가 별도 공지하는 특별 경매 형식

### 제 6조 (입찰)

- 회원이 경매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플랫폼의 지정된 방식으로 입찰을 제출해야 한다.
- 입찰가는 시자가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최고 입찰가가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해야 한다.
- 자동 입찰(Proxy bidding) 등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 고지한다.
- 일반적으로, 경매 마감 시점 이후에는 입찰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 제 7조 (낙찰 및 통지)

- 경매 종료 시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회원을 낙찰자로 선정한다.
- 즉시구매가 허용된 경우, 해당 가격으로 즉시 낙찰이 확정될 수 있다.
- 회사는 낙찰자에게 낙찰 사실과 함께 결제 기한을 안내한다. 지정된 기한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낙찰은 자동 취소되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낙찰 기회를 제공하거나 재경매할 수 있다.

## 제 4장 결제 및 수수료

### 제 8조 (결제)

- 낙찰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결제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해 지정된 기간 내에 결제해야 한다.
-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판매대금은 판매자에게 전달되며, 회사는 단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에스크로(보증)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 회사는 입찰자 또는 판매자에게 플랫폼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송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과 부과 방식은 별도 고지한다.

## 제 5장 취소 및 환불 정책

### 제 9조 (취소 및 환불의 일반 원칙)

- 낙찰 후 결제 이전에 회원이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회사 정책과 조건에 따라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낙찰 후에는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 결제 후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 및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거나, 배송 거부가 발생한 경우
  -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 (예: 허위 정보, 중대한 하자)

- 판매자가 거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위 경우에 고객이 청약철회(반품/환불)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반품 배송비 부담 여부 등은 회사 정책 또는 개별 판매자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상품 하자 또는 회사/판매자 귀책 사유일 경우 배송비를 포함한 반품 비용은 판매자 또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제 10조 (청약철회권 및 소비자 보호)

1. 만약 해당 거래가 일반 소비자 대상 전자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일정 기간(예: 7일) 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재화 반환을 위한 배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2. 단,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계약 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비 포함 전액을 사업자(판매자 또는 플랫폼)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 제 6장 회원의 의무 및 제재

### 제 11조 (회원의 의무)

1. 허위 정보 제공, 결제 기한 미준수, 반복적인 거래 취소, 입찰 조작 등은 금지된다.
2. 판매자 또는 구매자는 거래 과정에서 성실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낙찰 후 구매자는 결제, 판매자는 상품 배송 또는 인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3. 회사는 내부 기록(입찰 로그, 결제 기록, 통신 기록 등)을 보관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이를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 12조 (제재 조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해 경고, 일시 정지, 영구 정지 또는 이용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허위 정보 제공 또는 사기
- 반복적인 거래 취소 또는 낙찰 후 결제 거부
- 입찰 조작 또는 허위 입찰
- 기타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

## 제 7장 분쟁 해결 및 책임 한계

### 제 13조 (책임의 한계)

1. 회사는 단지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자이며, 판매자가 게재한 상품 정보의 진위, 품질, 상태 또는 배송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단, 상품의 표시·광고 내용과 실물이 현저히 다르거나, 회사 또는 판매자의 고의·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14조 (분쟁 해결 절차)

1. 회원 간 또는 회원과 회사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공식 분쟁 제기를 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출된 증빙 자료(입찰 기록, 결제 내역, 배송 증명, 통신 기록 등)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중재 결정을 내린다.
3. 만약 회사의 중재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 소송 또는 관련 소비자 보호 기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제 8장 기타 조항

### 제 15조 (약관의 변경 및 공지)

회사는 필요 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 및 동의 절차를 거친다.

### 제 16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기준으로 해석되며, 본 약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 소재의 관할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참고 및 유의사항

- 본 문서는 여러 경매 플랫폼과 일반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이용약관, 거래관행, 소비자 보호법적 요소 등을 종합한 **예시 약관 / 정책 문서**입니다.
- 실제 플랫폼에서 사용하거나 법적 효력을 확보하려면, 플랫폼의 구조(에스크로 여부, 정품 보증 여부, 배송 방식 등), 대상 제품 종류, 거래 형태(경매 / 중고 직거래 / 팝업 경매 등)에 맞춰 조항을 수정하고, 관련 법률(예: 소비자보호법, 전자거래법 등) 및 규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